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77호 관련)

2021. 5. 4.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5월 4일(화) 14:30~20:5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75호 및 제106호)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77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먼저, 은행과 금감원이 제출한 28건, 63건의 내역 차이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중복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 어느 쪽으로 카운트할 것인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임. 새로운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분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감원 분류 기준에 따라서 자료를 재편철해서 제출한 바 있음. 첫 번째 지적사항 설명내용 확인의 무 관련해서 간략히 보강설명 올리도록 하겠음. 금감원은 설문서에 대한 판매직원의 답변 내용, 은행 검사부의 자체 점검 결과 그리고 가입서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서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준수되었는지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셨음. 그러나 은행 검사부의 검사결과를 내방자, 판매직원의 대필 여부를 조사한 것일 뿐 설명내용 확인의무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사실을 조사한 것이 아님. 설명내용 확인의무는 실제 고객으로부터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상품 가입 신청서상 “듣고 이해하였음”란을 대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의 실무답변을 정리한 은행연합회 Q&A자료를 4월29일자로 입수

한 바가 있음. 거기에 의하면 설명의무 관련해서 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면 본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금융위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나와 있음. 따라서 설명의무의 이행과 설명내용 확인은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설명은 대리인에게 하고 설명내용 확인은 본인으로부터 자필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사료됨. 금감원에서 대필하여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28건을 살펴보니 판매인이 임의로 대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기재한 것이 11건이고 ○○○ 씨 같은 경우에는 판매직원이 자신의 언니나 형부를 대신해서 3건 정도 기재한 내용이 있었음. 그리고 업체 직원이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기재한 것도 4건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투자자를 대신하여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투자자의 의사에 반해서 판매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경우는 거의 없었음.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지적건수 28건 중에 24건은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금감원에서는 2차 증선위에서 자본시장법상 설명서 교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고 설명서가 실제로 투자자에게 교부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서명했다고 하면서 가입신청서에 고객이 “받았음” 또는 “수령 거절함”으로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서 교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다. 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신 바 있음. 먼저, 금감원에서도 자본시장법상 설명내용 확인의무와는 달리 설명서 교부 사실 확인의무라

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저희도 환영하는 입장임. 하지만 금감원의 주장은 입증책임을 전도했다고 사료가 됨. 대법원 판례상 행정처분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특히 과태료와 관련해서 피조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것으로 알고 있음. 두 번째로 금감원이 인용하셨던 ○○은행의 사례는 상품가입 신청서에 “교부받았음” 또는 “수령 거절함”이라는 란이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었음. 그렇기 때문에 교부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었습니 다만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분명히 “받았음” 또는 “수령 거절함”에 체크가 되어 있음. 금감원에서는 대필인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서 교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건 지적건수 중 대부분은 판매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직원 등이 설명을 듣고 체크한 것이므로 투자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금감원의 지적건수 63건 중 운용사가 작성한 제안서로 상담·교부했으나 설문서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했느냐 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바람에 ‘미교부’로 체크한 것이 13건 정도 되고 고객의 의사에 따라 판매직원이 “받았음” 또는 “수령 거절함”에 대신 체크한 것이 18건 되고 제안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고객이 가져가지 않아서 ‘미교부’라고 체크한 것이 16건 되는 등 판매직원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교부한 것으로 거짓기재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지적건수 63건 중 56건은 저희가 보기에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일부 직원들이 실

명법 위반을 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설명서의 수령 내지 거부 사실을 반드시 투자자 본인이 자필로 체크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 2017년 12월12일자 표준투자권유준칙에 의하면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관련해서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에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설명내용 확인과 관련해서 자필서명을 요하는 규정은 없음. 나아가서 설명내용 확인이 아니라 설명서 교부의무 이행사실을 확인받아야 된다는 조항이나 그 확인을 자필로 받아야 된다는 조항도 찾을 수가 없었음. 회사 참고사항 14-2.를 보시면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설명내용 확인에 관한 확인방법을 예시한 것이지, 설명서 교부의무 확인방법을 기재한 것은 아니었음. 그리고 자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2020년 2월20일자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보면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관련해서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는 이행할 수 없고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설명내용 확인의 방법으로 자필을 규정한 것이지, 설명서 교부의무 확인의 방법으로 자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음. 마찬가지로 2020년 표준투자권유준칙에도 설명서 교부의무 이행 사실 확인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 건 지적사항들은 대부분 2018년에 있었던 행위였기 때문에 2020년 투자형태의 자율적인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함. 다음으로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임. 2차 증선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탁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인지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송구합니다만 동의하기 어려움.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 판매는 펀드투자자문인력 자격이 아니라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 자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제출한 바와 같이 금감원에서 지적한 총 8건 중 6건을 판매한 직원 3명은 관련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음. 따라서 6건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나머지 2건과 관련해서도 본 건의 규정 취지는 이름만 특금이지, 실질적으로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특금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신탁이라는 것은 보장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제의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사료됨. 투자광고 규정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례와 표시·광고법상 광고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것임. 금감원에서 언급한 2015년 금융위 유권해석은 불특정 중에서도 매매유인 목적인 경우에만 광고로 볼 수 있다고 범위를 좁혀서 말씀하셨던 것이지, 불특정했던 자체가 어떤 기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됨. 따라서 금감원 지적사례 8건 중 5건은 고객의 요청에 의한 안내였기 때문에 광고로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1건은 ○○○이라는 개별 고객을 특정하여 송부한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음. 이 상단에 있는 2건 중 1명의 직원이 같은 고객에게 시차를 두고 발송한 것이 있는데 8월에 발송한 것은 직원이 선제적으로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두 번째 10월에 발송한 것은 사모펀드가

금방 마감되기 때문에 “이 상품이 나오면 나에게 알려 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받고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광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따라서 금감원이 지적건수는 8건이지만 5건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어서 4건으로 지적하셨는데 은행에서 보기에는 3건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또 한 가지 광고규제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IBK 637개의 영업점 등에서 단 3개의 영업점, 3명의 판매직원에 문제되는 행위임. 그리고 광고규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건당 무려 1억 원이나 됨.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광고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음. 참고로 사기죄에 대한 벌금 최고형량이 2,000만 원임.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벌금 최고형량은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해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6,000만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5,000만 원, 광고규제 위반 1억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거운 죄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지, 대필했다고 무조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라고 볼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객이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 민원 33건, ⊗⊗ 민원 25건 총 58건 중에 고객이 “나 권한 준 적 없다.”고 한 것은 2명의 3건이 있었다고 함. 끝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함. 금감원은 본 건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는 ‘중대’ 그리고 위반사실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동기는 ‘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고시 검사 및 제재규정 별표3

에 의하면 ‘중대’는 당해 또는 동일 위반 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본 건의 경우에는 □□□□ 펀드, ⊗⊗ 펀드 판매 중단 사태가 고려되었을 뿐이지, 검사 및 제재규정에서 말하는 위반행위. 즉,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광고규제 위반 등이 언론에 나온 사실은 저희로서는 들어보지 못했음. 따라서 본 건은 위반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내지 ‘경미’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또 동기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위반사실에 참작할 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상’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만 검사 및 제재규정을 살펴보니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등에 참작할 바가 없으면 ‘상’,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해당하지만 위반행위의 목적이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중’ 이렇게 고의가 있어야 ‘상’이나 ‘중’으로 봄. 그런데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설명내용 확인의무나 설명서 교부를 다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가사 대필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음. 따라서 동기도 저희로서는 ‘하’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바임. 그리고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불완전판매 관련된 조항들은 법률상 최고한도액이 1억 원으로 알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과태료 금액은 10억 원이라고 사료가 됨. 이에 대해서 2021년 3월23일에 행정기본법이 공포되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음. 제8조에 의하면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처럼 과태료 감경 여부에 문제가 되는 검사 및 제재규정에 감경 배제를 하려면 법률 또는 금융위 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률이나 고시에 이러한 감경 배제 조항은 없음. 그리고 행정기본법은 제9조에 평등의 원칙, 제10조에 비례의 원칙, 제11조에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제12조에 신뢰보호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따라서 규정 형식이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 금감원에서 이 조항을 기초로 과태료 감경 규정을 적용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귀속재량에 해당된다고 사료가 되고,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중소기업은행의 행위들이 법 위반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위반행위별 세부액수는 감경 규정에 따라 최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사료가 됨.

- (위원) 설명내용 확인의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음. 서명 등의 방법에는 자필이나 육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저희들이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 것 같은지? ‘듣고 이해하였음’과 서명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렇다면 ‘듣고 이해하였음’과 서명 부분인데 중소기업은행의 상품설명 확인서상에 ‘펀드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고, ‘(음영)’ 이 부분은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자필 기재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서명=자필”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상품설명서상에 기술하고 있는데 자필은 서명에 포함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 (진술인)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고객한테 설명 내용을 제대로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취지이지, 이 기재 자체를 자필로 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이번에 금소법에서도 서명을 반드시 자필로 해야 된다고 얘기는 없고 오히려 전자서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금소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행 상품설명 확인서상의 음영 부분은 ‘자필 기재 바랍니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으신데, 서명이 곧 자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 ▶ (진술인)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A은행에서는 ‘자필 기재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B은행의 경우에는 ‘자필 기재 바랍니다.’라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음.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소기업은행에서는 고객들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필 기재 바랍니다.’라는 부분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보다 잘 준수하기 위해서 기재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필 기재를 안 했으니까 설명내용 확인 안 했다고 해서 처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자필 기재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 (위원) 저의 이해가 짧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검토하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 이전의 DLF 건도 상품설명 확인서상 모두 ‘자필 기재 바랍니다.’라고 적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제가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자필 기재 바랍니다.’라는 것은 중소기업은행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표준화된 양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 ▶ (진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든 은행을 전수조사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함. 그렇지만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관련해서 투자자 본인에게 상품설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음. 지금 28건 중에 투자자 본인에게 상품설명을 한 것이 몇 건

인지?

▶ (진술인) 저희가 본인에게 직접 설명한 것은 2건이 해당됨.

- (위원) 세 번째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한 답변임. ⑥번을 보면 “본인이 임의로 ‘거부함’에 체크하였고, (간이)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음”이라고 했음. 오늘 진술하신 것은 12건이 다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자체 점검 표에 의하면 적정 8건, 부적정 4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음. 자체점검 결과 ‘적정’과 ‘부적정’으로 구분한 근거는 무엇인지?

▶ (진술인) 자체점검 결과 ‘적정’과 ‘부적정’은 검사부가 기준을 했었던 자료를 의미함.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부는 대필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 ‘적정’과 ‘부적정’은 대필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 부적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음. 저희가 이 12건을 공동으로 뺐던 부분은 ‘본인이 거부함’에 체크했던 부분이 고객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파악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임.

- (위원) 정확하게 8건과 4건에 대한 구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진술인) 8건과 4건에 대한 부분은 대리 유·무를 가지고 봤을 때 8건과 4건이 구별된다고 보시면 되겠음.

- (위원) 그리고 투자광고 규제 위반 관련해서 대리인께서 지

금 4건에 대해서 20xx년 x월xx일 건은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지?

▶ (진술인)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함.

○ (위원) 그래서 지금 3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다시 한 번 생각을, 제외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러면 20xx년 x월xx일 건은 인정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 주 위반사항으로 나오는데 설명을 할 때 설명서를 갖고 하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관행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지?

▶ (진술인) 그러함. 설명할 때는 당연히 설명서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음.

○ (위원) 그러면 설명은 된 것으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은

아닌데 설명서 교부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을 지 금감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설명서를 들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들고 갔든 안 들고 갔든, 그 표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설명의무가 이행이 됐다면 설명서를 수령했든 수령하지 않았든 설명서 교부와 관련된 의무는 이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고자) 그 부분은 법상 단계별로 각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먼저 설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설명내용을 잘 들어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에 설명서를 제공·교부해야 됨. 그중 첫 번째, 설명해야 될 의무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조치 대상이고, 두 번째, 설명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무와 설명서 교부 의무는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명을 이행했다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음.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은 설명하고 나서 설명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과 그다음에 설명서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것 그 두 가지만 있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설명내용 확인의무는 위반하지 않았는데 설명서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으로써 57건이 되겠음. 이 경우 설명을 하고 그 설명내용을 듣고 이해했는데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설명서 교부를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임. 왜냐하면 설명서 교부를 WM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영업점에서 설명함으로써 그 두 개가 격리된 장소에 있는 것임. 그러니까 일반 영업점에서 설명은 하고 설명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도 했는데 실제로 설명서는 영업점에서 교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부가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위원) 그것이 전부 사례(case)인지?

- (보고자) 대부분 그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음.

○ (위원) 중소기업은행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진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상품은 설명서 없이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 당연히 설명서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VIP 고객을 상대함에 있어서 VIP고객의 특성이 반영됨. 교부 문제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고객님이 ‘받았음’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설명서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음.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 질문지에 답변을 할 때 보기 중에 ‘받았음’에 체크했으나 고객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교부하지 않았다고 체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적인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서를 가지고 당연히 설명하고 설명서 교부를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기의 세밀함을 봤을 때 ‘받았음’이라고 체크하고 고객님이 “아니야. 나 그냥 안 가져갈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직원이 가져갔다고 체크할 것이냐, 안 가져갔다고 체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임.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VIP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요소들을 반영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제외건수에 담아서 말씀을 드린 사항임.

- (보고자) □□□□□펀드는 중소기업은행에서 공동관리제도를 이용해서 WM센터 PB팀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공동관리제도라는 것은 영업점에서도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그러다 보니까 영업점에서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상품설명을 진행하거나 소개를 하면서 고객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가입서류 등을 영업점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설명서 교부는 WM센터에 가서 이루어졌어야 됨. 사실 소개를 했으면 WM센터 방문해서 가입절차가 다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영업점에서 설명하고 가입서류만 받고 설명서 교부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임. 그런 사례(case)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위원) 설명서 교부를 안 하고 영업점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설명이 되었을 것인가 하는 반대의 의문도 생길 수 있음.
- ▶ (진술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했음. PB팀장들이 가서 설명을 하게 되면 설명서를 들고 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장에서 교부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에서 제안서를 교부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건에 해당되는 경우(case)가 되겠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할 때 설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 설

명서를 악의적으로 교부를 안 할 이유가 없음.

- (보고자) 조금 전에 진술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설명서 교부는 했는데 투자자가 수령을 안 해 갔기 때문에 실제로 교부는 했다고 은행직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사후적으로, 지금 증선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니깐 △△△△부 직원이 영업직원에게 물어봐서 답을 들은 내용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부에서 또 다른 책임이 있는 영업점 직원에게 제대로 교부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영업점 직원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고 답할 직원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의심이 듭.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의구심을 주셨음. 그리고 교부와 수령을 헷갈려서 질문서 답변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은행 영업점에서는 펀드를 새로 팔고 나면 자체 점검을 하고 있음. 그 점검서에 보면 투자설명서 교부 여부를 표시(check)하라고 되어 있음. 이미 여기에서 ‘교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설명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 PB직원들이 판매를 하고 나면 이것을 다 표시(check)해야 되는 직원들인데 교부와 수령의 차이를 몰라서 잘못 답을 했다는 것도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음.
- (참여자) 지난번에 제가 보험업법이나 의료법상 입증책임이 의사나 보험업 회사 측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로 전부 다 인정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진술 측에서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규정이 실제로 있는지?

- ▶ (진술인) 지금 말씀하신 개별법상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은 사인간의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과실이라든지,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 이런 것에 대해서 손해 입은 사람이 회계법인이나 분식회계를 한 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 민사소송할 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임. 아시다시피 이것은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 그리고 과태료 처분임.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이 금감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음. “국가기관 : 사기업”의 관계에서는 대법원 판례, 저희들이 유인물 130~131페이지에 정리해 드린 바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당연히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이 됨. 과태료에 대해서 ‘다투는 자에게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례도 131페이지에 저희들이 정리한 바 있음.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자면 감독당국인 금감원에서 보실 때 “설명서 가지고 설명만 하고 설명서 교부를 안 한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라고 의심은 하실 수가 있겠음. 하지만 본 건은 의심에서 나아가서 위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임. 한 건당 5,000만 원, 6,000만 원, 심지어 광고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1억 원을 부담하는 매우 중대한 처분임. 엄격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위반의 의심이 든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행위 1건당 5,000만 원, 6,000만 원, 1억 원을 국가기관, 공공기관인 금감원에서 사인인 중소기업은행에 내린다는 사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기본법 그리고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 맞추어서 타당한 것인지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음.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람.

- (참여자) 법률대리인께서는 변호사니까 아마 판례 검색을 해 보셨을 텐데, 이 사건에 참고해 볼 수 있을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가 있던데 확인해 보셨는지? 2013년 1월17일에 선고가 됐는데, 조금 전에 법률대리인께서 주장하셨던 것처럼 민사소송 사안이기는 해도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면서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금융기관에게 있다고 선고한 사례가 있던데 확인해 보셨는지?

▶ (진술인) 그 사건번호가 혹시 ‘가합’ 아닌지?

- (참여자) 맞음.

▶ (진술인) ‘가합’은 민사사건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 사건은 개인 간 대등 당사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개인과 금융기관 간에서는 금융기관이 더 ‘갑’이니까 금융기관의 입증이라는 얘기인 것임.

- (참여자) 또 한 가지 여쭙 것이 법률 일반원칙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은행 측에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대리권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물론 VIP고객이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신 점과 사정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이 법률문제가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위임장이

나 권한을 위임해 줬다고 할 수 있는 녹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증 없이 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술인)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위임장을 받았느냐, 본인을 확인 했느냐는 쟁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부분은 실명법 위반사항으로 알고 있고,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음.
- (참여자) 제재를 따로 받았다는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서명이 대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입증자료로서 유효하려면 정말로 권한 있는 자에게서 대필로 이루어진 서명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지만 감독기관이나 제재대상 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는 입증이 전혀 없음.
- ▶ (진술인) 저희가 기존에 충분히 설명 드린 바로 알고 있음. 대부분 가족관계로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고 부인이 와서 계약을 한 것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 대리인이니까 내가 계약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둘이 와서 본인 확인한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하는 경우들임. 대부분 가족관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위임장을 요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받은 부분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던 부분임.

- (위원) 과태료 처분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처분인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엄격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그리고 입증책임이 민법상, 민사상 따로 있고 행정상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주장하는 측에 있는 것임.
- (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재를 위한 근거는 금감원의 질문서와 중소기업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임. 자체점검 결과에서는 스스로 그 부분에 위반이 있었다, 부적정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감원의 당초 질문서에서는 표시가 없었던 것이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22건이고 설명서 교부의무와 관련해서는 5건임. 그 22건과 5건에 대해서 금감원도 그렇고 진술인 쪽도 그렇고 최대한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각각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그 22건과 5건에 대해서 舊「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별표3 제4호'나'목에 의한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